

【서평】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이 목 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자신이 속한 조국이 팽창적인 강국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을 깨닫는 일은 우리들에게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한다. 박태균의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는 한국 사람들이 숨쉬듯이 접해온 한미관계를 두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우선 박태균은 우리의 입장에 철저히 매몰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한미관계가 미국의 정치결정자들 뿐 아니라 때로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시각을 반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미관계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 한반도는 미국에게 세계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상정하는 시각도 반박하고 있다. 이 두 전통적 시각은 비록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판이하게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내부적 역동성을 간과한 결과 한미관계를 미국의 대한정책으로 환원함으로써 실체 없는 두 신화를 창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특수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불평등관계 자체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길 거부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미관계가 엄격한 의미에서 동맹관계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한반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전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

에 의해 결정되는 일방적 관계라는 사실 자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대면해야 하는 무수한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미관계도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성하는 여러 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이 한미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나아가 전 세계적 수준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내정세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은 오히려 세계정책의 틀 속에 대한정책을 끼워 맞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한미관계의 두 신화”는 한미관계가 한국과 미국 간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된다는 근본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박태균은 꼬집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상호작용을 통한 한미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한국 내부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변화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대한정책을 그릇되게 분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학습효과”도 이러한 악순환에 근거해 종종 한국 내부의 힘을 신뢰하길 꺼려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고정되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태균은 이제 우리도 지난 과거의 경험을 곱씹어 진정한 “학습효과”를 얻음으로써 비록 비정상적인 시작이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유연하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방과 제국』은 한미관계의 상호적 측면, 즉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접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8·15부터 5·18까지 각 시기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종전의 한미관계 연구와 달리 가시적인 정책결과의 성격 자체보다 한미관계의 전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특정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한국 내 보존된 자료가 지극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측 정책결정자들의 속내를 미국 내 자료에 의존해 해독한다는 제약을 시인하면서도 박태균은 “한미관계의 두 신화”를 뛰어넘기 위해 사람의 생각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전의 연구가 종종 한국을 포함해 미국이 구상하는 외교관계에서 물질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탓에 우리의 “학습효과”를 반감시켰기 때문에 종전의 분석틀을 벗어나야만 왜 소위 동맹으로 묶여진 한미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국가 간 목격되는 충돌과 대립의 정도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골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972년 유신체제 선포 이전에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서 하비브 대사가 “한미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고 했듯이 한미관계는 보통 외교관계보다 더 굴절이 심했다. 구체적으로 해방 후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미국의 선택과 한국 내 보수 세력의 예기치 않은 반발로 인한 정책수정, 미군의 전격적인 한반도 철수 단행과 전후 일본재건계획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원조,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과 이승만 제거를 계획하면서도 한국 내 대체세력의 부재로 실행하지 못한 사연, 1961년 군사쿠데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민선을 통해 박정희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려 노력한 배경, 한일협정 체결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주요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각자 서로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줄다리기, 이런 와중에서 미국 내 전쟁의 종결이나 부재 시마다 부상하는 주한미군 감축안과 이의 실현을 저지하려는 한국정부의 절박한 대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10·26사건의 배후와 5·18의 책임 문제까지 『우방과 제국』은 현존하는 자료에 근거해 치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태균은 한국과 미국 간 평온하지 못한 관계의 원인을 한미 양국에서 찾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의 국내 반응을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한 채 미국의 대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내 군사,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개입을 단행했든 또는 개입하길 거부했든 결과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한국의 내부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그에 따르는 개입에 때로는 거센 반발로 때로는 선제적 공세로 대응했으나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스스로 대응을 철회함으로써 미국에게는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이 무모하고 극히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놓았고 한국에게는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이 냉담하고 심지어 제국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앙금을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한미관계가 동맹을 통한 상호신뢰를 쌓기보다 “서로 부적절한 정책과 대응”을 되풀이한 이유로 한국 내 민주적 결핍(democratic deficit)을 들 수 있다. 박태균은 이를 한국에 비민주적 정부가 반복해서 집권함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의견교환이 제한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한미관계의 두 신화”가 그 빈 공간을 채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평가 통로가 막힌 채 심지어 미국의 부적절한 정책까지도 실리추구를 내세워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해온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관계가 비록 각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시절의 제국과 식민지 관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향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는 것이다.

한국 내 “한미관계에 대한 두 신화”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어떠할까? 『우방과 제국』은 이 반쪽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논리적 맥락에 비추어 미국은 비민주적 한국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조작된 지지에 근거해 민족주의라는 허울을 달고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응해왔다고 인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민주주의적 질서에 기초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다는데 반신반의한다는 데에 장래 한미관계의 관건이 걸려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히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얻은 결과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내세운 한국정부의 대응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순응했든 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협상카드를 사용해 대응했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비정상적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대응할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숙고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방과 제국』은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국이 실리보다 “명분과 도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평화와 인권”을 추구한다면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집권한 정부에 외부세력이 강력하게 개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한미관계의 영킹 실타래를 풀려면 상호간의 의심을 지워야 하며 한국 내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은 상호간 의심의 잠금쇠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20세기 한미관계가 한국에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학습효과”라며 이제는 “한미관계의 두 신화”를 털어내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실리 지향적 습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명분과 도덕”을 추구하는 한미관계, 더 나아가 모든 강대국에 대응하는 “명분과 도덕” 지향적 외교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에 대한 답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결국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상과 현실 간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방과 제국』은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